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2~3 면

**철도 노동자들이
전하는 파업 경험 &
철도 파업 평가**

▶ 4~7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4년 국제 전망

▶ 10~11 면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가
될 수 있을까?**

▶ 8~9 면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 12 면

발행인_김민식 편집인_김민식
인쇄인_ (주)아라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호)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3

Left21.com

제119호 | 2014년 1월 13일 ~ 1월 26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의 1백만 서명운동을 지지하자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전국대행처



김미영 기자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노동자들이 집에서 먹은 아침이 문 제였을 거다. 그러니까 공장에 도착 해서 기절하지.”

캄보디아의 의류공장에서 과로로 노동자 1백여 명이 졸도하자 내놓은 사측(King First Industrial)의 설명

“2004년 전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어요. 2004년 [미군의 팔루자 학살] 이후에는 냇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8개가 뿔개 걱정하고 있어요.”

미군, 알카에다에 이어 이라크 군에게까지 살해 당할 처지에 놓인 이라크 팔루자 시민들

“악마를 지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이다.”

한 네티즌, 이스라엘 전 총리 이리엘 샤론의 사망 임박 소식을 듣고

“민족이나 인종, 성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올림픽에 오는 모든 선수와 팬, 외빈 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러시아 푸틴의 위선 그는 지난해 6월 '동성애 통제법'에 서명했다

“이주자들이 항생제 내성이 강한 결핵 박테리아를 영국에 들여올 것”

영국 황색 언론 (더 선)의 황당한 인종차별 기사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하되 궁극적으로 역사는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국가의 의무”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의 속내

손석희, “선진국 가운데 교과서를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데?” 새누리당 의원 염동열, “라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등 ... 특히 북한”

한국 우익이 부러워하는 나라 1순위 북한?

“우리 학교가 주목받는 학교는 맞추 나”라는 생각에 흐뭇하기도”

상산고 교감, 교과사 역사교과서 채택으로 웃음을 맞자

“공공의 재산을 지키려 요즘 따라 더욱 애쓰는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노동자 최상남 역을 연기한 연기자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배우 한주완의 수상 소감 중, 발언 직후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작업 도중 잡담이나 컷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사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

않지도 쉬지도 말라? 중양대 청소노동자 근로 계약서

“대박은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의 줄임말”

〈MBC 뉴스〉가 일러 주는 박근혜가 '대박'을 좋아하는 이유, 뉴스거리 참 없다

“초당 4음절 발성 ... 평균보다 속도 느려 차분” 박근혜 팬클럽? TV조선의 박근혜 연설 분석

“너무 안고 싶었어요.”

지청해서 박근혜와 포옹한 MBN 기자, 짜고 치는 기자회견에는 다 이유가 있다

“가난의 역사를 잠 깨운 박정희, 그는 죽어서 신이 되었다.”

박근혜 남편 신동욱이 쓴 〈신이 된 대통령〉, 반인반신을 넘어 아예 신이 된 박정희

“밥도둑”

한 네티즌, 변희재와 간장게장의 공통점이라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모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1987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의료민주화,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 온 것에서 시작해 1998년 산별노조 건설 뒤 15년 동안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등을 요구하는 등 국민건강권 쟁취, ‘돈보다 생명’을 가장 큰 기조로 삼고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런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걸 막는 데 보건의료노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1년 내내 투쟁 하더라도,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먼저 오는 2월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파업에 적극 참가할 겁니다. 지금은 2천 명이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주년을 맞아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7일은 보건의 날인데 이날 범국민대책위와 의약 5단체 등과 함께 범국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에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선언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2013년 6월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4월 한 달 내내 조합원들과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그럴 경우 총파업을 할 겁니다. 정기국회로 넘기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겁니다.

의료 민영화는 쉽게 말해 병원에서 돈을 벌라는 것인데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원비를 많이 받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건데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이라 그렇죠.

따라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조건과 직결됩니다.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이는 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고요. 특히 병원 간 인수합병 문제는 고용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지만,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과 근로조건 악화를 막는 싸움이 될 거예요. 1백만 서명운동으로 국민과 환자 보호자와 함께할 것이고요. 또 우리 조합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입니다. 박근혜 정

부의 공공부문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봤겠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게 민영화다 아니다 하는 전선이 쳐질 것이니까요.

우리아말로 비정상적인 현재의 의료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을 줄이고, OECD 3분의 1 수준인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고,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재개원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가는 투쟁에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장호중
▶ 관련 기사 3면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위 어짜든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한국 의류공장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거대 의류 브랜드들에게 납품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공장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노동탄압을 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이 월 9만 원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월 15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2013년 내내 요구해왔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한 노동자문위원회의 실태조사만도 월 15만 원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권고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의류산업 업체를 의식한 캄보디아 정부가 월 11만 원 수준으로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캄보디아 노동조합은 12월 23일부터 총파업을 감행하였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생산에



2014년 1월 10일 민주노총 등 한국의 노동자들은 캄보디아 노동자들 편에서 한국 기업을 규탄했다.

차질을 빚자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은 자국 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사태 해결(강경진압)을 촉구하였다.

특히 한국 대사관은 12월 30일에 캄보디아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한국업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1월 2일에 노동자들이 한국 의류업체 약진통상 앞을 행진할 때에, 캄보디아 정에 특수부대인 911공수여단이 노동자들을 습격하였다. 무차별 구타와 폭행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5명의 승려를 포함한 10명이 연행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약진통상 측에서 개인적으로 공수부대에 연락하여 시위진압을 요청하였다고 하며, 한국 퇴역군인들이 이 공수부대의 교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인연으로

한국 업체의 요청에 즉각 대응했다는 증언도 있다.

무차별 폭력 진압이 있는 후에, 다음날인 1월 3일, 캄보디아 헌병대 및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였고 이 총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리고 이틀에 걸친 진압으로 체포된 23명의 노동자와 승려, 활동가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구금되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사관

게다가, 한국 대사관이 1월 5일에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관이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군대가 한국기업에 대해서만 직접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사관의 군대 투입요청이 캄보디아 정부가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경진압에 대해 유감 표명은커녕 자신들의 조치를 자랑한 대사관의 이 글은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1월 8일에 삭제되었다.

그리고 1월 8일에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정부와 업체는 군대 투입을 통한 강경진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미,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의 주도로 캄보디아 의류 자본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발표와 더불어, 캄보디아 군대의 발포가 정당했다는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이번 유혈진압의 배후에 한국정부와 기업이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1월 10일, 방글라데시 최대의 의류회사인 영원무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출동한 경찰이 발사한 실탄에 20살의 여성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영원무역 역시,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죽여 놓고도 뻔뻔한 한국 의류자본들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운동의 연대와 투쟁이 국경을 넘어 이뤄져야만 한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건강과대안 부대표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약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했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영리약국 허용도 추진한다.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다는 부대사업은 그야말로 병원이나 사람의 몸과 연관된 모든 사업이라 할 만하다.

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개발과 구매, 의료용구 개발·판매·임대업, 바이오 연구개발과 응용, 의약품 개발 등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포함됐고, 여기에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개발·임대·판매는 물론이며 온천장, 목욕탕,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연관 산업의 모든 사업 항목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병원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 상태가 정상화돼 병원 진료도 정상화된다면 의료비는 안 오를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은 '병원 자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다. 병원 자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병원 임대료를 높게 받고 의료기기, 즉 CT나 MRI같은 값어치 있는 고가 진단·치료장비를 병원에 비싸게 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임대료와 의료기기 임대료, 의료용구가 비싸지면 당장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비는 더 비싸지고 보험이 적용되는 진단과 치료 기계도 더 많이 돌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의료용구까지 판다니 별별 의료용구를 다 써야 할 판이다. 한마디로 의료비가 올라야 병원 자회사들이 돈을 번다.

바이오 연구개발 응용 및 의약품 개발까지 자회사에 허용되고 여기에 1년이 걸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나 신약 허가절차까지 건너뛰겠다니 줄기세포니 바이오 치료니 하는 이 모든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의한 치료, 아니 임상실험도 비싼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할 판이다.

이것만으로도 큰일이다. 그런데 병원 자회사에 건강식품·화장품도 포함되니 병원에서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사야 할 것이다. 온천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니 수(水)치료, 아로마세라피, 운동치료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도 모두 해야 한다. 이것도 환자들에게는 모두 치료 비용 즉 의료비 증가다. 한마디로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이고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증가된다.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원의 흑자를 남겼다. 이 돈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병원들을 인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과 기업 체인 영리병원의 탄생

여기에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협회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병원계는 환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됐다. 따라서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톨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파산하거나 음성적 거래를 하였으나 ...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병원협회관계자). 의료법인의 자산 가치가 책정되고 병원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대기업 체인형 영리병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따르는 구조조정 즉, 노동자 정리해고가 쉽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정부는 지금 철도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의료 민영화'를 치면 정부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뜬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번 조처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병원인으로서 이미 민영 시스템인데 무슨 의료 민영화냐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

이기 때문에(병상수로는 약 90퍼센트)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규제가 바로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비영리병원들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통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의 정이다.

또 하나 거짓말.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최고다. 여기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의료비를 더욱 높이겠다는 데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의 건강보험은 현재 전체 의료비의 55퍼센트만 부담해 줄 뿐이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씩은 가입한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가 더 올라가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떨어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도 건강보험이 해 주는 게 없으면 이를 건강보험의 붕괴라고 부른다. 멕시코가 그렇다.

정부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앞서 말했지만 정부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면 진료 내용이 정상화된다고 한다. 즉 의료비는 덜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면 수익 추구 때문에 의료비는 올라간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를 환자 1인당 약 20퍼센트 더 받는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10~3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료비가 연 1.3조~4조 원 상승한다(병상수 3.4~10.2퍼센트). 또한 개인병원의 2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66~92개의 지역병원이 문을 닫는다(도시집중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은 정부 말대로 '90퍼센트 사립병원' 모두에 대한 것이다. 병상수 10퍼센트가 영리병원화되면 의료비가 4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화는 모든 법인병원과 앞으로 법인병원화될 개인병원, 심지어 국립병원에도 해당한다. 의료비 '폭등'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거나 병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없다.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당장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이 영리화된 경우 2년 사이에 고참 직원을 특히 간호직을 해고시켰다. 영리병원은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하는 병원의 합병으로 재산 보전의 길

을 열어준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장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리해고가 줄을 이을 것이다.

또 부대사업에 고용된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 직영 식당이나 직영 주차장에 고용돼 있던 직원들은 이제 자회사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대안

마지막으로 그래도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는 거짓말이 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병원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병원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과잉 투자 때문이다. OECD 32개국 중 2000년 이후 인구당 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하나이고 그 증가율도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 병상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됐다. 이렇게 병상수가 늘었는데도 지금까지 병원 수익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그러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병원 수익이 줄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정도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떨까? 건강보험이 2년째 흑자가 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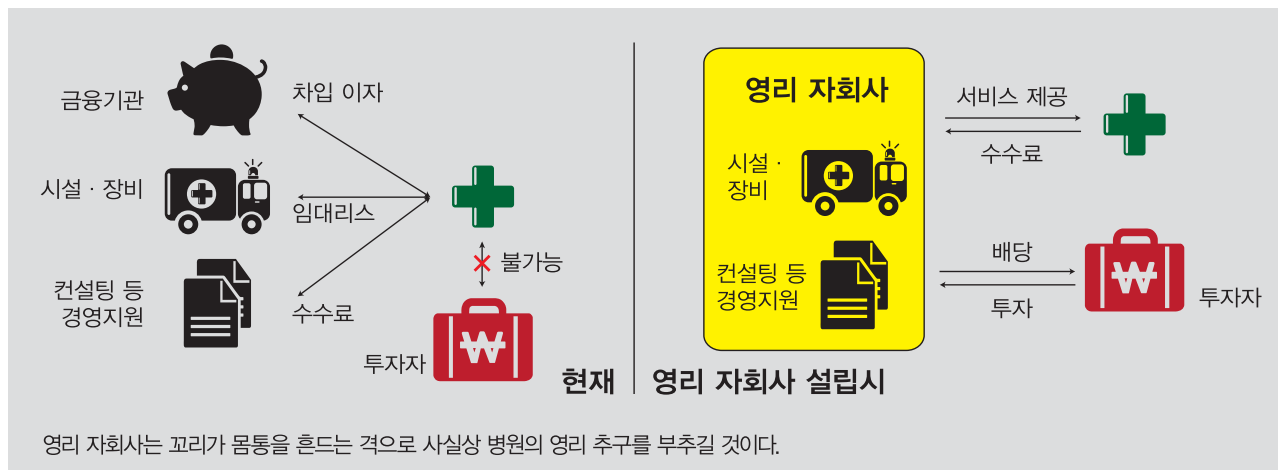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병원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정책이다. 또 병원들을 재벌들이 사도록 해 전국적으로 체인화하자는 정책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으로 국가가 경영이 악화된 병원을 사버리면 안 될까? 또 국민들이 병원에 더 갈 수 있도록 의료비를 더 깎아 주면 안 될까? 11조 원 중에 받은 병원을 사고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당장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둔 채 병원을 영리병원화해서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의료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약국도 추진하고 있으니 약값도 인상될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영리 자회사 방안은 2006~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추진되다가 촛불운동에 의해 좌절된 방안이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이 좌절된 적이 있다. 2006~10년에는 자회사를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라고 불렀다는 점이 지금과 다를 뿐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꼴통 우파 정권답게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법 개정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밀어 붙이겠다고 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면 우리도 더 큰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동자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맞서야 하고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모두 맞서야 한다. 의료까지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강패짓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전면적 저항이 필요하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경험과 새로운 투쟁 과제를 말한다

“조합원들의 역동성, 힘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어느 파업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파업이었다. 특히 이에 화답해, 파업을 승락하고자 했던 철도 노동자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이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더 싸울 수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부장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과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결의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전체 노동자가 함께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도 얻은 것 같다.

무엇보다 대책위 동지들이 전국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함께 투쟁해 준 것 때문에 많은 힘을 얻었다. 현장에도 지지와 응원의 대자보나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다. 이런 경험들이 처음이어서 놀랐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싸웠던 것 같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더 뽀푼 뭉치고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여 줬던 조합원

들의 역동성을 보면서 놀랐다.

공사가 우리를 길들이기 하고 현장 통제하려 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 현장의 힘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민영화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장 탄압이나 철도를 여러 개 자회사로 쪼개는 계획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그것이 민영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속속 밝혀지고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동지들을 다시 일으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파업을 포함한 현장 투쟁을 다시 조직화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파업에 자부심을 느낀다”

박현수 부산차량지부 조사부장

“가장 긴 파업이었다. 노선 분리가 철도 전체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고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했다. 또 민영화 반대 여론이 불붙으면서 투쟁의 에너지가 커졌다.

이번 파업이 좋았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눌러 왔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억눌려 왔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도 성과고, 지금 조합원들의 사기도 괜찮다.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누르려고 하는데,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활기가 있다.

파업으로 여론을 움직였다는 자부심도 있는 것 같다.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있는 것 같다. 은근히 어깨에 힘도 들어가 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투쟁에도 영향을 줄 듯하다. 투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이번 파업에서 아쉬운 점은 장기간 파업하면서 파괴력보다는 대오 유지에 많이 치우쳤다는 점이다.”

“파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힘 있게 현장 투쟁하자”

박세중 청량리기관차지부장

“23일간의 철도 파업, 비록 원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지만 이번 파업이 가져다 준 성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적인 파업 일수, 철도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은 자신감,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각인된 사회적 의제, 국민 ‘지지’ 속에서 시작돼 더 큰 사회 ‘연대’로 확산된 투쟁, 민주노총을 비롯해 조직 노동자들에게도 분명한 투쟁 계기가 된 파업 등등.

철도 노동자들은 그 어떤 노동 강요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은 셈이다. 결과만을 두고 아쉬운 평가를 하기에는 우리 모두의 한 달은 매우 값진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라는 일말의 정치적 실마리는 남겨 두었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철도 민영화 저지’는 아직 요원하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점점 더 노골적인 형태로 완결돼 가고 있으며, 올해 예정인 물류 자회사 설립은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여러 국면과 계기를 통해 또다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자신감과 굳건한 연대를 기반으로 다시 힘 있게 대처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자신감이 오른 철도 노동자라지만 대량 징계로 드러나는 철도공사의 강력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향후 투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징계와 탄

압을 이미 각오했었지만, 현실적인 악영향은 점점 커질 것이다. 미미한 성과에 비춰보면 억울하기 그지 없다.

따라서 탄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철도공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뿐만 아니라 그에 맞선 현장 투쟁을 더 힘 있게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성사 여부를 떠나, 필공 명단을 다시 제출하고 재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강력한 징계 반대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지퍼놓은 작은 불씨, 민영화 저지의 마음을 다시 모아 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에 많은 동지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올해도 민영화 저지 투쟁의 길을 역동적으로 걸어갈 것이다. 투쟁!”

“조직력과 동지애가 높아졌다”

최성묵 성북송무지부 조직부장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전면 파업을 얘기하는 조합원들이 더 늘었다. 파업 전에는 징계 등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이번 파업을 겪으면서 다음엔 제대로 싸워보자는 생각이 늘어난 것 같다.

이번 파업으로 조직력도 강해지고, 동지애도 높아지고, 파업 투쟁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이후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대책위 동지들이 조합원들을 응원하고 자극하며 서로 배워갔으면 좋겠다.”

“이번엔 귀족노조란 비난이 안 먹혔다”

김보균 성북송무지부 문화체육부장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파업하면 분명히 ‘귀족노조’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꽤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느끼며 민영화를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생각보다 엄청 단호하게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은 성과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와 함께 복귀율이 상당히 낮았고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올랐다. 필공 조합원들도 집회에 나오거나 파업 조합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지·응원해 줬다.

또한 조합원들의 동지애는 더 끈끈해졌다. 이번 투쟁으로 쌓인 조직력이 이후 투쟁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파업 투쟁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직력이 탄탄해진 게 가장 큰 성과다. 국회 소위? 나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말싸움만 하다 끝낼 것이다.

물론 지도부는 흔치 않던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이기려면 전면 파업만이 승산 있는 투쟁이었다. 정부도, 사측도 모든 것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올해는 노동조건 둘러싼 쟁점이 더 불거질 것”

박성수 성북송무지부장

“사측은 임금협상이 해를 넘겼으며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명분도 없는 얘기다. 올해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사측은 자동

승급제를 폐지하려 하고, 기관사들의 경우에는 승무율을 높여 기관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 공사 전환 직후 맺은 특별단협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올해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쟁점이 지난해보다 더 불거질 것

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벌여 승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재파업 결의를 모아내고 사측과 정부에 다시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2013년 12월 9일 파업 출정식.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월 9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철도노조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악질적인 탄압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의 중징계 시도, 1백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백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가히 살인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들에게 이를 갈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중앙 집행부와 지방본부장들, 22명의 지부장·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근 지부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지만, 핵심 간부 13명은 여전히 수배 상태에 있다.

심지어 최연혜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이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강성노조’”라며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여 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을 협박했다. 그는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떠넘기며 추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완전히 부당하다. 요금 폭등, 대형참사, 인력감축의 재앙을 불러 올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정부는 거듭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폭로된 바처럼, 철도공사 스스로 작성한 최신 문건에서조차 서발 KTX의 법인 분리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였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노동자·시민들이 철도 파업에 열화와 같은 응원과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이 ‘불법’이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뿌리부터 불법·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는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

철도공사 측이 수서 KTX 분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임금 동결, 구조조정 운운했던 데서 보듯, 철도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 반대 파업이 “근로조건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사측

의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정당한 파업을 이끈 노조 중앙 집행부와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체포 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국제연수노련 대표단은 파업 기간에 벌어진 탄압만으로도 이미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최연혜가 이런 비판에 귀를 막고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파업에 대한 보복일 뿐 아니라 끝나지 않은 분할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물류·사회사 분할 등 본격적인 ‘철도공사 쪼개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철도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투쟁에도 지지를 보내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금껏 그랬듯,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각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 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측은 최근 중앙·지방본부·지부 간부들은 물론,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이 중 상당수를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대량 징계면 가히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수준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파업 참가자 5백여 명을 징계해고하고 1천여 명을 강제로 전향 배치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한 분노를 만들 것입니다.”

“사측은 한 사람당 징계 심사에 불과 30분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최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소명 기회도 없이 30분 만에 해고하려 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 공세는 23일간의 파업으로 저력을 보여 준 철도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는 시도요, 철도 파업 이후 자신감을 얻은 전체 노동계급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박근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최연혜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파업 참가가 경험에 없다. 하지만 필공 파업이 정부와 사측에 타격을 심하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음에 파업하면 반드시 전면 파업이어야 이번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호락호락 무릎 꿇지는 않을 태세다.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후에도 곳곳에서 개별 복귀서 작성, “정신 교육” 등을 강요하는 사측에 맞섰다.

2라운드

1주일 가까이 복귀하지 않고 투쟁을 벌인 서울차량지부의 이상이 조합원은 8일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측은 우리더러 개별적으로 사업소에 올라와 사측이 만든 복귀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김민준 기자

2013년 12월 31일 현장 투쟁을 결의하며 복귀하는 철도 노동자들.

모두 (노조) 지부가 만든 업무복귀 신고서에 연서명해 제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농성하며 싸웠습니다.

“사측은 ‘정신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소장이 개별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 파업하면 더 크게 징계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것도 거부하고 총회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사측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직위해제를 풀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일부가 징계 대상에 오르긴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현장 투쟁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문산차량지부에서도 노동자들은 평조합원 2명에 대한 징계 시도에 맞서 3일간 작업을 거부했다. 통쾌하게도 결국 이들의 직위해제는 모두 풀렸다.

서울전기지부와 수색차량지부에서도 비슷한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부들은 복귀 당일 현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당당하게 깃발 들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용산기관차지부의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은 우리를 굴욕적으로 찍어 내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부들이 복귀를 완료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대량 중징계, 강제 순환전보, 지도부 구속 등을 봤을 때 본격적인 2라운드 투쟁은 이제부터다.

이에, 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을 규탄하며 전국 상경 집회 등 항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 조합원, 필공 조합원 가릴 것 없이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광범하다. 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전국의 지역대책위들도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에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1월 7일 열린 노조 확대쟁대위에선 “투쟁을 한층 강화해 현장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 지부장은 “우리 지부는 복귀자들이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직위해제된 동지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층 지부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서로 연결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도 계속돼야 한다.

박설

“정부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조재현 성북송무지부 조합원

“언론과 정부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파업 때 보니 언론과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이런 국민적 지지와 호응 속에서 파업을 하는

게 정말 처음이었다.

나는 1980년대 후반에 입사해 27년차 기관사로 연봉이 7천만 원이다. 그러나 휴일에도 근무를 해서 받는 시간 외 수당이 3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임금에서 휴일 근무 수당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엔 모 아니면 도로 싸워야”

김영훈 성북송무지부 조합원

“2012년에 입사해 처음 겪은 파업이었다. 예전에 언론에서 노동조합 파업 뉴스를 접할 때면 대체 파업을 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겪으며 선배 조합원들이 징계를 각오하고 싸우는 모습을 봤고, 국

민적 호응을 몸소 느꼈다. 그래서 파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파업을 접을 때 사실 얻은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국회 소위를 통해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모 아니면 도로’라는 생각으로 파업해야 했다.”

“생애 첫 파업 경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김진희 성북송무지부 조합원

“입사해서 처음 접한 파업이었다. 노동조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기관사가 되고 나서 민영화가 되면 철도 노동자들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부

당한 피해를 입는지 알게 됐고, 다른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왜 싸우는지도 알게 됐다.

나는 이번 파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앞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할 이유를 이번 파업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됐다.”

“보수언론의 편파 보도에 신물이 난다”

이성운 성북송무지부 조합원

“아버지가 철도 파업 뉴스를 보시더니 ‘파업 참가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랑 밥을 안 먹은 지 한 달이 넘었다. 보수언론의 편파 보도에 신물이 난다.

누가 파업을 하고 싶어 하나. 누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선배들이 징계를 각오하며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철도 노

동자들 스스로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싸움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2010년에 입사해서 파업 참가 경험이 없다. 하지만 필공 파업이 정부와 사측에 타격을 심하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음에 파업하면 반드시 전면 파업이어야 이번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조합원들이 잘 싸웠다”

부산차량지부 조합원

“파업이 10일 넘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전에 최장 기록이 8일이었으니까. 집행부가 준비한 것보다 조합원들이 훨씬 잘 따라

쫓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지지 덕분에 길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 하나로 정부와 싸운 거라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23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23일간의 철도 파업이 막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오랜만에 스스로의 힘과 잠재력을 느끼며 불통 우파 박근혜 정부에 맞서 그야말로 영웅적인 전투를 치렀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의 온갖 악행에 분노하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인식됐다. ‘박근혜에 맞서 저항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던 광범한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차별 받는 사회집단들에 희망을 안겨 준 것이다.

철도 파업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투쟁하지 않는 배무른 귀족이라는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다. 이번 파업 때는 그 흔한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 비난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철도 노동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 주자, 박근혜에 대한 광범한 불만이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결집됐다.

지배계급의 정치조직인 정부에 맞서 철도 파업은 노동계급 전체의 응원으로 초기부터 ‘계급 대리전’이 됐다.

그러자, 정부와 지배자들은 전선의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며 다른 부문에서 공격을 연기하거나 일부 양보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12월 국회에서 가스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고, 투쟁이 확대되고 전진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도 일부 성과를 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이처럼, 파업 덕분에 철도 노동자들은 ‘인민의 호민관’ 구실을 했다.

이번 철도노조·민주노총 투쟁으로 대중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다. 1월 1일 〈문화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7 퍼센트나 됐고, 특히 20대에선 그 수치가 80.6 퍼센트나 됐다!

이번에 불붙은 철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의료 민영화 반대로도 옮겨가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보건 의료노조는 “지난해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의 한 해를 만들자”며 1백만 서명운동과 총력 투쟁 등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철도 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야 했고 상처를 입었다. 박근혜 지지율은 30퍼센트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지고, 젊은층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에 그토록 화력을 쏟아붓고도,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지 못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자신감과 조직력을 얻었고, 지금도 현장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파업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보여 준 투지와 잠재력에 비춰 보면 아쉽게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막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마음 한편에 다소 불안감을 지니고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라는 철도공사 내부 문서까지 폭로됐다. 그러나 민영화가 완전히 다 진행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싸움이 남아 있다.

이처럼, 비록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치작업을 막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



철도파업은 민주노총이 함께 나서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며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 2013년 12월 28일 수만 명이 결집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어도 훨씬 더 크게 봤을 때는 이번 파업은 큰 성과와 자양분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그 배경

이렇게 이번 파업의 파장은 상당했다. 언론들이 앞다퉈 대서특필했던 북한 정권의 장성택 처형 사건도 하루 만에 신문 1면에서 밀려났다. 박근혜가 즐겨 써먹는 매카시즘 카드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그렇수록 박근혜 정부는 무리수를 두며 더욱 강경하게 대처했다. 철도 파업이 우리 편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받은 만큼 박근혜 정부는 이 파업을 기어코 저지하고 분쇄하려 했다.

8천여 명 직위해제,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 중징계 방침, 1백16억 원대의 가압류와 1백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와 사측의 탄압 공세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신속했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라는 만행까지 감행했다.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정 대처하겠다”,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을 꺾고 민영화의 발판을 닦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게 사활적이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관철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했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민영화를 시급히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박근혜는 임금체계 개편, 시간제 일자리 등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확대해 노동계급 고통 전가로 경제 위기에 대처하려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점증하는 동아시아 제국주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강경 우익 정권에게 안보 위기를 부채질하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더 강경한 탄압을 가하는 통치 방향을 확고히 하려 한다.

따라서 정부는 애초부터 자신의 공약인 “국민과의 합의”에 따라

를 생각이 없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고 노동자들의 투쟁도 굳건한 상황에서 모종의 타협이나 야당 중재가 잘 먹힐 리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노조 지도부가 그토록 중재 역할을 해 주기 바랐던 민주당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비록 철도공사나 수서발 KTX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기는 해도 수서발 KTX를 포함해 철도공사 분할 자체는 막을 수 없는 내용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쿠팡귀도 귀지 않아 이 개정안은 부각도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사무총장 박기춘은 “파업을 위한 싸움은 안 된다”며 도리어 노조 설득에나 나섰다.

이런 일들을 두고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당의 중재와 국회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자신의 브로커 구실을 (헛되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골사납다.

“이것이 정치”라는 〈경향신문〉이나, 파국을 막았으며 별로 얻은 것도 없는 합의를 반기기는 통합진보당 논평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의 태세와 세력관계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문제가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 파업에서 밀리면 어떤 후과를 감당해야 할지를, 즉 향후 자신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분노도 분노지만, 투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엔 자신감이 중요하다. 특히, 작은 싸움들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열차승무 순환 전보, 전기직 외주화 등에 맞선 투쟁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철도 파업은 형식상으로는 개별 기업에서의 투쟁이었지만, 이미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선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띠었고, “제발 철도노조가 박근혜를 막아 달라”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을 만큼 전체 노동계급의 분노를 대변한 ‘계급 대리전’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었다.

다행히도,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무렵에 이미 철도 민영화에 한정해서 말하면 사회적 세력관계는 노동계급 편에 유리했다. 특히 여론이 상당히 좋았다. 부분적으로 이는 거의 1년 반 가까이 전국 곳곳에서 철도노조와 지역·권역 대책위들이 쌓아온 성과이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단호하게 파업에 돌입하면서부터는 민영화 반대와 파업 지지 여론은 더 뜨거워졌다. 이 투쟁은 단 이틀 만에 전국적인 초점으로 떠올랐다.

파업 대오는 점점 더 늘어났고, 2009년엔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일부 지부들도 기꺼이 파업 대오에 합세했다. 필공 조합원들도 집회·홍보전 등에 참가하며 자발적으로 투쟁 기금을 걷어 파업하는 동료 조합원들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체 수송을 거부하며 노동자 연대의 모범을 보였다. 해의 철도 노동자들의 연대와 시위도 계속 이어졌다.

파업 지속에도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하자 투쟁 수위를 전면 파업으로 높여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심지어 필공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이 지침을 내리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는 무리수를 두며 더욱 강경하게 대처했다. 22일,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그 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더 큰 분노와 반발을 샀고, 이제 투쟁의 판돈은 더 커졌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본부 침탈을 규탄하며 “전체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는 “12월 28일 총파업”(사실상 파업이 아니라 항의 집회)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침탈은 많은 노동자들을 격분케 했다. 침탈 당일과 다음날까지 전국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 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 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 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 는 노림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익 지배 자들이 박근혜에게 바라던 모습일 테니 말이다.

박근혜 본인도 '원칙의 리더십은 물론 이공계 출신인 것까지 닮았다'고 흰소리를 하며 대처 리더십을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해 왔다.

실제로 두 정부는 닮은 게 많다. 둘 다 신자유주의 강성 우파 정권이다. 경제 위 기 상황에서 노동운동에게 '반패보다는 립' 구실을 바라는 우익 지배자들의 전폭 적 지지를 받았다. 둘 다 기업 규제를 줄 이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려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질서'와 냉정주의를 앞세워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강화하는 것도 닮은 꼴이 다. 노동운동에 적대적이고 "법과 질서"로 위협하는 것도 닮았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성공한 대처 신화'를 한국에서 재현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 지정학적 환경, 계급세력균형 등을 비교 검토해서 확률적 예측을 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 부는 대처보다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있 고 운신의 폭도 좁다.

경제 위기와 사기 저하

경제 위기는 노동운동의 분출을 자극 하기도 하지만, 높아지는 실업률은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 시 영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상태에서 경 제 위기와 우파 집권기를 맞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1970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히스 정부 와 우파 지배자들은 집권 첫 해에 '복지국 가 유지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천선 하기로 결정했다. 전후 대호황이 불황에 자리를 내주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 다. 부실 기업 퇴출, 민영화, 노동조합 약

화, 임금 통제 등 시장주의 공세가 주요 내용이었다(셀스턴 합의).

그러나 부실 기업 부도를 방지했다가 오히려 연관 기업들이 동반 추락하고 실 업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감당하 기 힘들었다. 1971년에는 노동조합의 파 업권을 약화시키는 법 개약을 했다가 노 동계급의 전반적 반격에 직면했다. 한껏 고양된 산업투쟁의 전투성에 직면해 히 스 정부는 레임덕에 빠졌고, 시장주의 공 세를 포기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마 거릿 대처는 '셀스턴 합의' 포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유일한 장관이었다.

노동자 투쟁 고강의 결과로 1974년 노 동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이 정부를 기다린 것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의 경 이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부자들에게 분주의를 구하려고 노동계급을 배신했다. 그들은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 구조 조정과 임금 억제 정책을 이어받았다. 심지어 군대를 보내 파업을 진압했다.

영국 노총(TUC) 지도부는 자신들이 지 지한 정부를 위해 투쟁을 자제하라고 설 득하는 일을 맡았다. 노동당 정부는 현장 조합원 운동의 리더들을 상근간부층으로 끌어들이는 법 개정을 했다. 기층의 압력 을 완화시키는 게 제도 개혁으로 노총 지도 부를 도운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 노조로 조직된 부문이 주도한 '불탄의 겨울'(197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임금 가이드라인에 저항한 노조들의 투쟁) 투쟁으로 임금 가이드라 인을 분쇄하고 임금 상승을 얻어냈다. 하 지만, 노동당과 오랫동안 연계돼 왔던 전 통적인 노동운동 주축 부문의 사기와 확신은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노동당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다.

보수당의 대안(노동당)은 있었지만, '배 신한 노동당'의 대안은 없었다. 환멸과 대 안 부재가 부른 정치적 혼란 때문에 상황 이 반전되기가 힘들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대처 정부는 이처럼 노동당 정부의 배신과 경제 위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전반적 사기가 꺾인 후에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 등장했다.

광원 파업

그런데도 대처는 초기에 매우 신중해 야 했다. 대처는 1980년 탄광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 고 아직 노조와 대결할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었다. 대처는 1983년 두 번째 총 선에서 승리하고서야 탄광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비축 해 놓고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대 처가 연대 파업과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파로 간 부문주의를 조장하고 난 뒤 비로소 영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광원노조를 공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처는 노동법 개악 을 하면서 매우 순차적으로 접근했다. 그 초점은 파업법(대체인력 투입을 물리적 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금지하고 파업과 관련한 노조 간부들의 면책특권을 없애 는 것이었다. 대처는 1983년 두 번째 총 선에서 승리하고서야 탄광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비축 해 놓고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대 처가 연대 파업과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파로 간 부문주의를 조장하고 난 뒤 비로소 영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광원노조를 공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대처가 막 집권했을 때 경제 상황 은 지금의 박근혜처럼 암울했다. 영국 경 제는 1980~81년 세계 공황의 한복판에 있었다. 1980~83년 사이에 제조업체의 약 4분의 1이 사라졌다. 실업자는 2백만 명까지 늘어났다.

공포를게도 1982년부터는 경기가 회 복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는 실질적 인 성장이 시작됐다. 물론 노동자들을 위 해선 결코였지만, 대처는 경기 회복을 민영 화와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노조 약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버rier 을 수 있었다. 광원 파업은 오랜 경기 침체 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적 노력에 해를 끼 치는 '집단지괴주'라고 공격받았다.



박근혜의 맞은편에는 1980년대 영국보다 더 전투적이고 투자가 살아나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버티고 있다. 10만 명이 모인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노총 집회.

그럼에도 광원노조의 파업에 승리의 기 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처는 한때 양 보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바로 그 때 영 국노총 지도자들은 연대파업을 취소해 버렸다. 버티다 못해 광원노조가 무릎을 꿇 은 뒤에야, 실은 파업에 대비한 석탄 재고 량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전투성 저하, 지도 부의 우경화 등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 도되는 경제 상황을 억압적 신자유주의 의 정당성 근거로 써먹었던 대처보다 불 리한 점이다. 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양보 의 여지도 적다. 그래서 박근혜는 복지 공 약을 대부분 배지웠었고, 이것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세계경제 위기에서 비롯한 제국주의 간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박근혜 에게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경 제 위기는 국가 간 경쟁도 날카롭게 만든 다. 특히 경제 위기가 불균등하게 전개되 면서 국제 제국주의 질서의 세력균형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최근 위기 이후 미국 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경쟁이 급속도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정학적 쟁점들 은 지배자들 내에서 분열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이 문제들에서 자신감 보다는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이 박근 혜에게 유리하지 못한 것은 계급세력 균형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 대처는 노 동운동의 사기저하를 이용해 구조조 정, 민영화, 노조 제압, 시장 경쟁과 법 질서 확립을 슬로건 삼아 선거운동을 했다.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 동자들의 저항에 대처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고조되는 불만을 의식해 어울리지도 않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선거를 치려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또, 철도 파업 내내 민영 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전투에서 박근혜는 불리한 처지다.

박근혜 정부의 맞은 편에 서는 1980년대 영국보다 더 전투적이고 투 자가 살아나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버티고 있다. 지난해 봄의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투쟁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까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주된 동력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박근혜는 유신 스타일의 공안통치 방식을 쓰려 하지만 그것이 노동운동에 크게 먹히 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파업 동안 연대는 점차 확산됐다. 조직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조금씩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공 황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대처 때와 같 은 사기 저하보다는 오히려 격렬한 계 급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개혁주의

그러므로 대처 당시 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우경화는 산업 현장의 전 투성이 가라앉은 상황과 결부해서 이 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신적 개혁 주의 지도자만 문제고, 그들만 아니었 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처럼 단정해 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불리한 세력관계를 자초하 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자기 패배적 정책이 면회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인식하자는 것이다.

대처는 1979년부터 치러진 세 번의 총선에서 내리 이겼는데, 매번 노동당 의 득표 감소 턱을 봤다. 대처는 노동 당에 저서 정권을 빼앗겼던 1964년 총 선에서 보수당이 얻은 것보다도 더 적은 득표율로 연이어 집권했다. "승리의 문턱에서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이었다.

1984년 당시 노동당 대표 닐 키클 은 광원 파업 때문에 노조를 비난했다. 영국 노총 지도부는 광원 파업 연대 건설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보수당의 노동법 개악을 받아들였다. 영국 노총이 1986년에 내놓은 문서 《일하는 사람 들: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은 이제 노동운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지식인들도 이런 우경적 후퇴 에 가담했는데, 공산당 소속 역사가인 에릭 홀스브레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는 더는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 의 전략이 불가능하니 화이트칼라 중 간계급과 동맹을 맺고 온건한 의회주 의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대화"론 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현대화"론은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의 1980년 대 판이었다.

닐 키클과 홀스브 등은 노동당의 연 대이은 선거 패배를 노동당이 상정한다 고 돌려 여권(그 후회정치)의 후퇴로 봤다. 그리고 그 후퇴의 책임이 자신들의 배 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보 수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 사기

저하 탓에 이런 책임전가식 담론이 용 인됐고, '정치'가 대중투쟁의 대응품으 로서 각광을 받았다. 이때의 '정치'는 산업현장의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정치가 아니라 제도권의 의회 · 개혁주 의 '정치'였을 뿐이다.

지금 세력관계상 한국의 노동운동 안에서 개혁주의자들이 1980년대 영 국처럼 노골적으로 준동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과 정당당 의원단은 '불법' 파업을 옹호했고, 비록 형식적인 것이 었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연대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아래로부터의 압력 이 강했기 때문이다.

좌파의 과제

따라서 한국의 좌파들은 대처 당시 영국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셈 이다. 따라서 일부 좌파들은 박근혜의 우익적 공세를 과장하는 견해를 단념 해야 한다. 흔히 그런 견해는 계급투쟁 을 약화시킬 계급 타협(인민전선)을 추 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오히려 결코 불리하지 않은 세력관 계를 이용해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 을 건설하는 일에 강조점을 뒀야 한다. 산 업 현장에서의 전투성과 세력관계야말로 급 진좌파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고, 우파 정 부를 패퇴시킬 진정한 힘이다. 물론 개혁 주의자들도 기층의 압력을 받고 있으 므로 좌파화적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 는, 현장 투쟁을 건설하는 일에 공동전 선적 방식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을 고무해 세력관계를 노동계급 편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 보다 법안 제출이나 담배 지도권 다름 방식의 '정치'투쟁만으로도 사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던 노동당 좌파들의 경 험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이 중 토 니 벤이 이끄는 '벤 좌파'는 1979년 총 선에서 정권을 잃은 후 그 반작용으로 당내 선거에서 약진했다. 그러나 도취 감에서 깨기도 전에 이들은 순식간에 세력을 잃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계급 투쟁의 수준이 낮아서 좌파의 의제를 추진할 실제 동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기야 1983년에는 노동당 내 극좌 파였던 '밀리턴트' 경향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당에서 쫓겨났다. 이들이 주도 하던 지구당은 폐쇄됐다. 런던시의회 의 다수파를 장악한 "붉은 켄" 켄 리빙 스톤 파도 계급투쟁과 유리된 정치투 쟁의 한계를 보여 줬다. 광원 파업 패 배로 세력관계가 기운 뒤인 1986년 총 선에서 보수당이 얻은 것보다도 더 적은 득표율로 연이어 집권했다. "승리의 문턱에서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이었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매우 우 익적인 정부로서 공안통치 스타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들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결코 강력 하지는 않다. 이들에 맞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영국 노동운동보 다 더 강하고 전투적이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 정부 에 맞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일러 준다. 아울러 당분간 팽팽한 세력관계 때문에 어떤 철도 파업처럼 투쟁들의 결과가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 회법(하지) 말고 오히려 의회적 성취 여부 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의식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혁명적 좌파는 노동계급 의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대화"론 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현대화"론은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의 1980년 대 판이었다.

닐 키클과 홀스브 등은 노동당의 연 대이은 선거 패배를 노동당이 상정한다 고 돌려 여권(그 후회정치)의 후퇴로 봤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일본 총리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가 크다.

그동안 아베는 2006~07년 총리 재임 시절에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통한 으로 남는다"고 말해 왔다. 아베는 "침략 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본 제국 주의 침략의 역사도 부정하는 등 우익적 이 본심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신사 참배 강행이 놀랄 만한 일은 아 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들의 이런 뻔뻔한 행 보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식민 지 배와 전쟁 범죄로 고통받은 한국과 동 아 시아 민중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보는 이들이 단 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 이 아니다. 이 문제는 최근 동아시아에서 고조되는 제국주의적 긴장과 갈등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즉, 아베와 일 본 우익들의 역사 왜곡과 신사 참배 문제 는 제국주의적 경쟁 속에서 군사 대국으 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현재 시도와 관 련이 있다.

당선 때부터 아베는 "일본을 되돌려 놓 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을 경제적 ·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 동 안 해체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제 · 정 치 위기가 있다. 특히, 일본 지배자들은 2010년에 중국에 세계총력 2위의 자리 를 내주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아베는 "현재 국제적 세력 균 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일본이 있는 아시 아 · 태평양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일본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현 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특히 해양 근처 대국으로 거듭나려는 시도)도 일본 에 큰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족쇄가 돼 온 평화헌법을 개 정하고, '집단지 자위권'을 도입하고자 해 왔다. 아베가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 의 의미는 국제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인 사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도 나 서고 있는데, 이때 북핵 · 미사일 문제와 우 익적인 정부로서 공안통치 스타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들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결코 강력 하지는 않다. 이들에 맞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영국 노동운동보 다 더 강하고 전투적이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 정부 에 맞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일러 준다. 아울러 당분간 팽팽한 세력관계 때문에 어떤 철도 파업처럼 투쟁들의 결과가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 회법(하지) 말고 오히려 의회적 성취 여부 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의식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혁명적 좌파는 노동계급 의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대화"론 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현대화"론은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의 1980년 대 판이었다.

닐 키클과 홀스브 등은 노동당의 연 대이은 선거 패배를 노동당이 상정한다 고 돌려 여권(그 후회정치)의 후퇴로 봤다.

대응하겠다는 MD 시스템의 일부인 최 종단계고고도지역방위(THAAD)시스템 과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 도입 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준(準)으로 남는다"고 말해 왔다. 아베는 "침략 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본 제국 주의 침략의 역사도 부정하는 등 우익적 이 본심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신사 참배 강행이 놀랄 만한 일은 아 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들의 이런 뻔뻔한 행 보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식민 지 배와 전쟁 범죄로 고통받은 한국과 동 아 시아 민중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보는 이들이 단 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 이 아니다. 이 문제는 최근 동아시아에서 고조되는 제국주의적 긴장과 갈등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즉, 아베와 일 본 우익들의 역사 왜곡과 신사 참배 문제 는 제국주의적 경쟁 속에서 군사 대국으 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현재 시도와 관 련이 있다.

당선 때부터 아베는 "일본을 되돌려 놓 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을 경제적 ·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 동 안 해체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제 · 정 치 위기가 있다. 특히, 일본 지배자들은 2010년에 중국에 세계총력 2위의 자리 를 내주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아베는 "현재 국제적 세력 균 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일본이 있는 아시 아 · 태평양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일본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현 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특히 해양 근처 대국으로 거듭나려는 시도)도 일본 에 큰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족쇄가 돼 온 평화헌법을 개 정하고, '집단지 자위권'을 도입하고자 해 왔다. 아베가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 의 의미는 국제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인 사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도 나 서고 있는데, 이때 북핵 · 미사일 문제와 우 익적인 정부로서 공안통치 스타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들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결코 강력 하지는 않다. 이들에 맞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영국 노동운동보 다 더 강하고 전투적이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 정부 에 맞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일러 준다. 아울러 당분간 팽팽한 세력관계 때문에 어떤 철도 파업처럼 투쟁들의 결과가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 회법(하지) 말고 오히려 의회적 성취 여부 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의식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현주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자가 2013년 9월 경, 이듬해 정세를 전망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대침체”)가 즉각 광범한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반란이 터져나왔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파장은 흡사 1848년, 1917~23년, 1968년의 국제적 반란과 혁명을 재현하는 듯했다. 그리스에서는 총파업이 반복됐고, 스페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광장을 점거했고, [미국의]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무엇보다도 아랍 혁명이 일어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자를 차례로 무너뜨렸고 이후 리비아·시리아·바레인·예멘으로 확산됐다.

영국도 이런 분위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2010년에 대규모 학생 반란이 일어났고 뒤이어 노동조합이 이끄는 대규모 시위와 반란이 여러 도시들에서 벌어졌고, [2011년] 11월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2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2년 남짓 지난 지금, 2011년의 반란이 고무한 희망은 마치 그릇된 것이었던 양 비쳐진다. 유로존과 영국에서 긴축 정책이 계속되고, 중동에서는 반혁명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비판론”이 좌파 일부에서 생겨났고 SWP(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급진화와 저항이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위기와 저항의 관계는 단순하거나 직접적이지 않다. 우리가 목도하는 정치 상황은 각종 모순과 불안정, 급격한 전환이 특징이다. 우리 편이 줄곧 잇달아 승리만 거두거나, 반대로 끝없이 패배만 겪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1928년에 트로츠키는 제1차세계대전 개전 이전 시기와 종전 무렵 이후 시기를 다음과 같이 대조했다. (‘개전 전에는’) 모순이 유기적으로 축적되고 있었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 내 계급 투쟁은 대부분 합법의 틀을 넘어서지 않았다.”

반면에 종전 무렵 이후의 시기는 “폭발력이 그 특징”이었고, “정치의 밀물과 썰물이 순식간에 바뀌었”으며 “돌발적인 계급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 상황이 좌와 우 사이를 미친 듯이 왔다갔다했다.”

오늘날 트로츠키가 지목한 둘째 시기의 특징들을 일부 찾을 수 있다. 당시 트로츠키가 이끌어낸 핵심 결론은 것처럼 빠르게 정세와 국면이 바뀌는 상황일수록 정치적 리더십과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의 구실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더딘 진전

정치적 휘발성이 커지고, 투쟁과 급진화를 일으킬 잠재적 요인들이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세계경제가 뿌리 깊게 위기 상태인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선진국 경제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성장한다는 징후 때문에 최근 경제 회복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지만 말이다.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연준)은 매달 8백50억 달러어치의 채권 구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을 서서히 거둘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이후 2013년 말 실제로 양적완화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로존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말들은 틀린 것이다.



이집트 시위군. [1972년 오스만 제국과 튀니지] 시위군

새로운 “투쟁의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2013년 9월 25일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의 뒷받침을 받아 큰 규모로 일어난 그리스 반파시즘 시위.

비록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과거 어떤 경기 후퇴 때보다도 느리게 회복하고 있다. 8월에 실업률이 7.3퍼센트로 살짝 떨어졌는데 핵심적으로 30만 명이상이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EP)는 2008년 대침체 때문에 노동인구에서 이탈했거나 노동인구로 유입되지 못한 “실종 노동자”가 3백8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유로존은 2011년 후반에 시작된 경기 후퇴 시기를 18개월 동안 겪은 후 2013년 중반에 빠져나왔다. 그러나 회복은 여전히 불균등하고 언제든 뒤집어지기 쉬운 상태다. 단적으로 7월에 유로존 제조업 생산량이 줄었고, 남유럽 상황은 여전히 깊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깊은 침체 상황이다.

그리스는 5년째 경기 후퇴를 겪고 있는데 GDP가 2008년보다 20퍼센트 이상 줄었고, 실업률은 28퍼센트에 달한다. (충격적이게도 15~24세 인구 3분의 2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의 파괴적인 “내적 평가절하”[통화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 비용을 낮춰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정책]로 공공부문 부채를 줄인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가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하기 전보다 더 커졌다. 독일에 투자 붐이 일어났다.

덕분에 성장세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자산 거품 형태로 심각한 문제를 누적해 왔다. 조선소부터 태양광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서 막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악성 부채가 늘어 금융 시스템을 압박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남한, 브라질, 터키,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환율과 주식 시장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이 나라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서구 중앙 은행들이 만들어 낸 신용(상당 부분 신용 시장에 투기 거품으로 흘러 들어간)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이다. IMF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가, 2007~08년 서구를 강타한 “신용 경색”[은행이 기업이나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상황]과 비슷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더 많은 긴축을 요구했다. 스페인에서는 전체 인구 4천7백만 명 중에 6백만 명이 실업 상태다. 유로존에서 셋째로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는 비록 경제 수축 속도는 줄었지만 2년 넘게 여전히 경기 후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수준도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지난해 유럽중앙은행장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나서면서[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함]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던 남유럽 정부들은 더 싼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럽 은행들은 여전히 만성적으로 취약하고, 막대한 악성 부채에 둘러 있다.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이 말했듯 “유로존이 붕괴하는 것을 간신히 막는 조처를 취하는 것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은 미국, 유로존, 일본이 꿈조차 꾸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 위기와중에 결정적인 성장 엔진 구실을 해 왔지만, 지금 그 엔진은 서서히 식고 있다. 중국 국가는 위기에 대처하려고 2008~09년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썼고 그 결과 사회 기반 시설, 부동산, 공장에 투자 붐이 일어났다.

덕분에 성장세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자산 거품 형태로 심각한 문제를 누적해 왔다. 조선소부터 태양광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서 막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악성 부채가 늘어 금융 시스템을 압박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남한, 브라질, 터키,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환율과 주식 시장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이 나라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서구 중앙 은행들이 만들어 낸 신용(상당 부분 신용 시장에 투기 거품으로 흘러 들어간)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이다. IMF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가, 2007~08년 서구를 강타한 “신용 경색”[은행이 기업이나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상황]과 비슷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마르크스는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

에 본질로 내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자본주의는 위기 해결 수단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위기 자체 때문에 실업률이 치솟고,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취약하고 수익성 낮은 자본들이 파산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특히 긴축과 임금 압박으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익성 낮은] 자본이 파산한 규모가, 체제의 중심부에서 건실한 회복과 안정적 축적 재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그 때문에 각종 낮은 수익성과 유동성, 심지어 사실상 파산 상태인데도 파산하지 않는 “좀비” 은행과 회사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세계경제가 “느리게 기어가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묘사하면서 1932~37년 대불황이나 1880년대 장기 불황 기간 중 첨예한 공황과 공황 사이의 저성장 시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계급 생활조건과 각종 “사회적 임금”[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이 때문에 과거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정치 구조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긴축과, 그에 맞선 폭발적 대응 둘 다 보게 될 것이다.

휘발성, 반란 그리고 정치

갑자기 대중 반란과 격동이 분출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두 가지 최근 사례가 두드러진다.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게지 공원 개발을 둘러싼 초여름의 투쟁이 에르도안 총리의 이슬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변했다. 77개 도시에서 1백만 명 정도가 거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동시에 브라질에서도 버스과 기타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악한 대중교통과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에 항의하는 대중 반란으로 나아갔다. 터키와 브라질은 둘 다 지난 십 년간 경제 성장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던 나라들이었고, 경제 성장 덕분에 사회가 비교적 평온했다. 그런데 그처럼 대규모로 시위

가 터져나온 것은, 외관상 차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어도 기저에는 쓰라린 감정이 깊게 누적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대중 반란이 정치, 지도, 조직의 문제를 가볍게 제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두 곳 모두 다양한 세력들(터키에서 [1990년대까지 장기 집권한] 케말 민족주의, 브라질에서는 이전까지 사기져하했던 우파 등)이 운동에 개입해 운동을 자신들 뜻대로 이끌어 했다. <가디언>의 시무스 밀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배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들고 누구를 선출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놓은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미숙한 운동이 변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중대한 힘을 갖고 있어서 분위기를 바꾸고, 정책을 폐기시키고,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조직이나 뚜렷한 정치 강령 없이는 활활 타오른 뒤 사그라들거나, 더 강력하고 뿌리내린 세력에 납치 또는 전용될 위험에 취약하다.”

정치 문제는 아랍 혁명에서도 날카롭게 전면에 등장했는데, 특히 이집트에서 그렇다. 군부가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을 대규모로 살해한 것은 반혁명이 성급 전진한 위험성을 보여 준다.

반혁명 세력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개혁주의 정치가 이중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권한 무슬림형제단이 혁명의 염원을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다. 그 대신 무슬림형제단은 신자유주의 정책, 권위주의적 대응, 군부 특권 수호에 나섰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결집한 것을 군부가 악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좌파 야권의 구실이 중요했다. 이들은 군부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구실을 했다.

아직 혁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힘을 맞았고, 혁명이 요구한 “빵, 자유, 사회 정의”는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고 쉽사리 성취될 것도 아니다. 특히, 노동자 운동이 지난 18개월 동안 크게 전진했고, 이집트 노동자들

▶ 11면으로 이어짐

아프리카민족회의

남아공 최대 노조가 ANC와 결별하고 새 노동자 정당 설립을 요구하다

켄 올렌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노동조합이 지난달 열린 특별 대의원대회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에 대한 선거적 지지를 철회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 설립 요구로 이어졌다. 조합원 33만 8천 명을 대표해 대의원 약 1천2백여 명이 12월 17~20일에 열린 급속노조(Numsa)의 특별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의원대회는 ANC와 남아공 공산당(이하 SACP)과 남아공노동조합연합(이하 코사투, COSATU)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소집됐다. 이 셋은 삼각동맹을 결성해 1994년 이래로 남아공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이 동맹의 위기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 위기는 2012년 마리카나 학

살*과 뒤이은 파업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됐다. 올해 남아공에서는 총선이 치러진다. 영국의 노동당과 비슷한 성향의 ANC는 노동조합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급속노조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설적 결의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20년 넘도록 조합원들에게 ANC와 SACP를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NC와 SACP를 키운 것은 노동계급의 회생을 늘렸을 뿐이다. 이는 ANC의 부르주아적 지도자들이 학살을 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급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삼각동맹을 재활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급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코사투에게 ANC·SACP와 결별하라고 통보했다.

최후통첩
이런 ‘최후통첩’을 받은 코사투는 ANC·SACP에 비판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허풍을 떨며 마리카나 학살 이후로 떨어진 무수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 한다. 물론 코사투가 실제로 삼각동맹에서 이탈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급속노조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980년대의 민주통일전선(United

Democratic Front)이 한 것처럼 작업장과 지역에서 공동 투쟁을 조직할 새로운 통일전선을 건설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조합원들과 직장위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모든 전선과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급속노조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Movement of Socialism)의 건설을 “모색”할 계획도 발표했다. 급속노조 대의원대회는 더 나아가 대통령 제이컵 주마와 경찰장장 리아 피에가의 사임도 요구했다. 마리카나 학살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도 요구했다. 남아공의 <소셜리스트 워커> 지지자들은 민주좌파전선(DLF)에 속해 있다. 민주좌파전선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급속노조 대의원대회는 민족해방 정치 시대의 결정적 종결을 상징한다. “급속노조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대중에 기반을 둔 정치적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이 주도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85호 / 번역 이진화



남아공 급속노조 노동자들의 행진.

이집트 국가 탄압으로 체포 위기에 처한 혁명가들

주디스 오어

이집트 군사정권이 2011년 혁명을 이끌었던 사회주의자들과 활동가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 “반혁명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을 학살했던 정권이 이제 우리를 겨냥한다” 하고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이집트 혁명작사회주의 자단체(RS) 회원 와심 와그디는 말했다. 연초에 발행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적어도 2천6백65명이 살해됐다.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타도할 때보다 갑절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한 것이다. 혁명가들은 새로운 집회규제법에 따라 줄줄이 구속됐다. 1월 5일에는 카이로에서 알라 알델 파타(2005년 국경없는기자회 특별상을 수상한 블로거)와 모나 셰이프 남매를 포함한 활동가 10 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주 목요일(1월 2일), 알렉산드

리아의 RS 회원 마히나이크 엘마스리와 하산 무스타파는 다른 활동가 4명과 함께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허가 없이 시위를 조직하고 경찰을 공격했다는 혐의로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기소됐다. **감금** 마히나이크와 하산은 언제나 구속될 수 있다. 와심은 “경찰이 마히나이크와 하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혁명가들이다” 하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체포 명령은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했던 혁명가들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언론은 RS가 국가의 적이며 외국인들과 손잡은 배신자들이라고 비난해 왔다. 민간 위성방송 채널 알 카헤라 왈 나스는 심지어 표적이 된 활동가들의 도청된 휴대폰 통화를 방송하기까지 했다. 당시 TV프로그램의 진행자 압둘레힘 알리는 방송한 것과 같은 도청된 녹음기록 5천여 개를 더 공개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와심은 “좌파의 일부, 특히 스탈린주의 좌파가 반혁명을 지원하고 때때로는 환영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 화가 더 치민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은 무바라크가 했던 것과 똑같은 탄압을 사용해 혁명을 끝장내길 바란다. “혁명은 경찰과 국가의 힘에 대한 공포의 벽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공포의 벽은 재건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군사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이 전진하지 않는다면, 혁명은 퇴보할 것이다.” 마히나이크는 굴하지 않는다. “국가는 법, 감옥과 그들의 개들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를 모두 감옥에 가두어도,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이전에 국가가 혁명가들을 공격했을 때, 국제 연대가 탄압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연대가 절실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85호 / 번역 최병현

이라크 알카에다 성장은 미국 중동 개입의 산물

사이먼 아사프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신형 무기를 보내고 있다. 이라크 서부의 안바르 주(州)에서 자라나고 있는 반란을 분쇄하려는 이라크 정부를 돕기 위해서다. 안바르 주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2003~11년)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 이라크 정부가 [안바르 주에 속한] 팔루자와 라마디에 있던 평화적 항의 운동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하면서 안바르 지역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 농성장들은 아랍의 봄에 고무돼 설치된 것이었다. 시위대는 수니파를 팔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총리 누리 알 말리키가 이끄는 이라크 정부는 시아파가 꼭 잡고 있는 종파적 정부라면서 말이다. 말리키는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의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하다. 농성장 공격은 각성운동(Awakening Movement)과 연계된 지역과 부족들 대(對) 경찰의 무장 충돌을 촉발했다. 각성운동은 원래는 미국에 맞서는 저항운동의 일부였다. 그러나 미군 점령기에 알카에다에 충성하는 이슬람주의 전사들을 몰아내는 운동으로 바뀌었다.

2013년 12월 말부터 계속된 정부군과 부족들 사이의 무장 충돌에 뒤이어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알카에다가 안바르 시로 진입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 각성운동, 알카에다의 삼각 전투가 시작됐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나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로 알려져 있다. 이 전투는 시리아로도 번졌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알카에다 조직들 대(對) 이슬람주의 단체와 혁명적 세력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ISIS와 연계된 부대들은 시리아 혁명을 낚아채려 해 왔다. ISIS와 연계된 부대들은 혁명 운동에서 생겨난 민중 위원회들을 폐지시키고, [종교적] 소수자 집단에 종파적 공격을 하기 시작했으며, 세속적[비종교적] 반군 지도자들을 살해했다. 혁명 물결이 퇴조하며 이라크 내 항쟁과 시리아 혁명 상황이 복잡해지고 내부 분열이 심해졌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여러 지역적 이익과 힘들이 서로, 정권에 맞서, 혁명의 생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85호 / 번역 정다운

▶ 10면에서 이어짐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쟁의 행위에 참가했다. 장군들이 정부를 장악한 뒤에 쟁의 행위 수는 급감했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 11~12월에 다시 급증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을 향한 군부 탄압과 갈수록 파업 노동자와 혁명가를 향한 탄압이 거세지는 것은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는 혁명이 굴곡 없이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과, 후퇴와 좌절을 겪지 않으

려면 중대한 정치적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유럽의 양극화** 유럽 정치는 계속 양극화돼 왔다. 한편으로는 급진 좌파 세력이 성장했는데 그리스의 시리자뿐 아니라 프랑스의 좌파전선이 그랬고, 네덜란드 사회당과 덴마크의 적녹동맹도 지지 기반이 넓어졌다. 동시에 극우도 성장했는데 이들은 프랑스 국민전선(FN)처럼 ‘유럽식 파시즘’의 탈을

쓰기도 하고, 그리스 황금새벽당처럼 노골적으로 나치를 표방하기도 한다.[유럽식 파시즘은 의회 선거를 위한 점잔 빼기에 주력하는 반면 노골적 나치들은 공포감 주는 거리 행진도 똑같이 중시한다.] 유럽 노동자 투쟁은 24시간 대중 파업(종종 48시간)이 간간이 벌어지는 모양새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갈수록 두드러진다. 예컨대 포르투갈의 양대 주요 노총은 6월 말 24시간 총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스페인에

서는 대규모 교육 노동자 파업이 있었고, 그리스는 48시간 총파업을 9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이 총파업은 반파시즘 활동가 살해 항의 시위와 결합돼 황금새벽당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렸다.] 덴마크에서도 지난 봄 교사들이 대규모로 나서 학교를 폐쇄시켰다. 비록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아직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투쟁의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노조 지도자들이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는 압박을 [아래로부터] 꾸준히 받는 가운데, 지도부의 공식적인 투쟁 선언을 현장조합원들의 능동성과 결합시키면 노동계급의 자신감을 높이고 현장조합원 조직을 재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리스에서 이 과정이 가장 진척됐다. 번역 김종환
* [] 안의 말은 옮긴이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박래곤 인권중심 사람 소장 / 국정원 '내란음모정적 공작' 공안탄압 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내란음모 사건의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아 가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음이 확인됐고,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되고 말았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단연 협조자가 녹음했다는 5월 12일 회합의 녹취록이다. 녹취록이 처음으로 <한국일보>에 공개됐던 지난해 8월 말, 세상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회합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중복몰이를 쏟아 냈다. 전정이 발발할 때 북과 연합해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식의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 있었고, 그를 근거로 당연히 이석기 의원 등은 내란음모로 처벌받아 마땅한 세력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면 2백72곳을 수정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공판 증거조사에서는 변호인단이 무려 4백14곳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 변호인단은 2백37곳이 중대한 오류라고 보았다. 이렇게 조작된 녹취록은 그야말로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공안검찰의 의도대로 작문이 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녹취록을 원문 그대로 놓고 보면 전정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정세에서 반전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놓고 강연과 반반토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



서지 제민 (노동과 세계)

다. 물론 반반토론을 하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무기 문제나 시설의 파괴와 같은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모두 “폰구를 잡는 소리”라고 이석기 의원 등은 일축하고 있다.

협조자라는 이 아무개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공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내란음모를 준비했다는 ‘RO’ 조직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고 있다. 강령도 없고, 가입 절차도 없고, 결성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 체계도 없고, 단지 협조자의 추정이라는 진술만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부터 보름 동안 우리 사회를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는 이처럼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의 조작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재판의 결론은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고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오는 1월 말에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인데,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에 따라 구형을 하게 된다. 형법에 따라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형으로 다루어진다.



2013년 10월 19일 '내란음모정적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가 주최한 민주찾기대행진

검찰은 사형과 무기형을 놓고 고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중형을 구형하게 된다면 다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대공세, 그리고 수구집단의 대공세가 재연될 것이다. 이성을 잃은 듯한 수구세력의 총공세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공정판 재판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을 극대화해서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설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 영화 등이 담긴 CD나 몇몇 문건들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

물 소지죄(국가보안법 제7조 5항)와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1항)로도 그들을 기소한 상태다. 그러므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진다고 해도 국가보안법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상의 자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반하는 악법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내란음모 혐의 등은 무죄로 나더라도 유죄로

계속 구속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럴 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진보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진보진영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7명의 전원 무죄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잊지도 않은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신 패가시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국정원 수사관과 공안검사의 사퇴뿐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 사건의 기각도 요구해야 한다. 현재도 매우 정치화돼 있고, 그 구성원들이 보수화돼 있어서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심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를 확인하고, 관련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토록 해, 결국 공안정적공작을 통해 유신독재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파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진보의 여정에 크나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내란음모 사건 무죄를 받아 내고, 구속자들을 석방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대중적인 탄원서 작성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겠다.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 탄원서 동참 방법

국정원 '내란음모정적공작' 공안탄압 대책위 웹사이트(www.gongjak.org)에서 석방탄원서 파일을 다운받아 이메일(gongjak.nis@gmail.com) 또는 팩스(02-6280-0350)로 1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201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2차 파업 집회

끈질긴 투쟁으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1만 원 인상안보다 1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번 결정

을 반기면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자' 하고 말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꾸준히 이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차례 대규모의 서울 동원을 비롯해 지역별 파업·집회·농성을 해 왔다. 이 속에서 정부 대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처우 개선을 얻었고, 지역 교육청과의 교섭에서도 수당 인상, 고용보장 대책 마련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강경 우파 정부하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등을 공약하며 당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공약들을 거둬들이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투쟁을 이어가 1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월급제 시행·근속 수당 인상 등을 이뤘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올해는 호봉제·교육공무직 전환을 이루겠다고 버리고 있다. 계속되는 학교비정규직의 도전과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점(울산 현대차공장 앞)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1월 27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1월 28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8:30~19:3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오아시스빌딩)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1월 29일)

울산 상남동 철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 대학 공개판매는 겨울방학 동안 쉽니다.

레프트21 안드로이드 앱 출시

새 온라인 기사와 신문이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레프트21>의 최신 기사를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evF3xg>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혁 저지! 민주노총 집중투쟁

1월 18일(토)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역 주최: 민주노총

김미리 기자

홈플러스 노동자 투쟁

“이제 아줌마라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월 9일 노조를 결성하고 '0.5시간 계약제' 폐지, 노동조건 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12월 말 전국적으로 지부별 순환 파업을 진행했고, 전 조합원 동시 하루 파업을 앞둔 1월 9일 새벽 사측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지부 정미화 지부장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대해 말한다.

“홈플러스 영등포매장 수산코너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일도 고되고 힘들지만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관리자들이 아줌마들을 군대식으로 다루고 억압적인 분위기였어요. 아줌마끼리 마음 놓고 말도 못했죠.

처음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은 알바로 일하는데 회사에 밋보이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요. 또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해고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꺾소리 안 하고, 반항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보니 절실하게 노동조합이 필요했어요. 아줌마들이 경향이 없어도 ‘우리는 왜 노동조합이 없지?’,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그래도 막상 노동조합을 해 보자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는 겁이 났죠. 처음에는 겁나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했다가 잘릴 수도 있는데 누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이마트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 계기가 됐어요. 이마트 위생장님이 오셔서 “노동조합은 겁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노조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을 보니 정말 ‘이때가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위해 나서 주지 않고, 목소리 높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시작하니 반응들이 엄청 좋았어요. 동시에 막 가입을 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40~50명이 가입을 했어요. ‘아,

이거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줌마들이 서로 팔뚝 뭉쳐서 격려하면서 조직을 했죠. 그게 벌써 1백 명이 넘어요. 전국적으로 1천5백 명이 가입을 했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을 하면서 부서마다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시급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7시간 30분을 일하는데 고객센터는 6시간 30분, 계산대에서 일하는 언니들은 4시간 30분, 5시간 30분도 다르더라고요.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데 우리는 7시간 30분을 일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무급이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지만 연장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월급명세표를 주지도 않고, 쥐도 계산법을 몰랐어요.

2교대라 오전조·오후조가 인수인계 회의를 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10~20분씩 걸리죠. 또 손님이 오면 [퇴근] 시간됐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미리 와서 옷 갈아입고, 근무시간 10분 전에 내려가고, 끝나면 다음 조하고 미팅하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8시간도 훨씬 넘는데 회사는 7시간 30분만 임금을 주고, 1시간 유급 휴게시간도 안 주고, 30분 연장수당도 안 주는 거예요. 회사가 우리를 등쳐먹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맨날 공짜로 일해 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0.5계약제 문제를 제기하니 회사에 법에 걸릴 것 없다고만 했어요. 교섭에서 우리가 유급휴가 요구하니 높은 사람이 “휴가가 왜 필요하냐”고 했었는데 할 말 다 한 거죠.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단호한 투쟁으로 0.5시간 계약제 폐지 약속을 받아냈다. 협상 타결에 기뻐하는 노동자들.

그래도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서 부당한 일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참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관리자에게 대들면 잘릴까, 인사고가 점수에 불이익이 와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부분 파업(지부별 순환 파업)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노조에 가입을 했지만 파업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부산, 울산에서 먼저 했다고 하니 까 용기를 얻었죠.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만나서 설득했지만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부분 파업 날 매장 앞에 조합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정말이지 감동스러워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요구조차 안 들어 주는 것은 아줌마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철도 파업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파업한다고 경찰이 잡아간다고 하니까 겁이 났는데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당하면 지지받고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파업 하루 하면 돈이 얼마 깎인 다면서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9일에 파업했으면 다 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거든요. 그걸 아니까 회사가 양보한 것 같아요.

잠정합의의 하고 다들 엄청 좋아해요. 7시

간 30분 일하던 사람들은 2년 안에 단계적으로 8시간 노동으로 다 바꾸기로 했어요. 계산대는 6시간 20분이라고 0.2 계약도 했는데 그건 당장 없어졌고요. 더 이상은 0.5계약으로는 직원을 안 뽑기로 했어요.

물론 단계적 시행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16개월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도 되고, 유급 휴게시간 30분도 받게 됐어요. 노동조합 사무실, 전임자 등 노조활동도 보장받았고요. 3월부터 임금협약 시작하니까 이 때 더 강하게 싸워서 아쉬운 것도 다 따내자고 조합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줌마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투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인터뷰·정리 조명지

기아차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철회하고 통상임금 판결 이행하라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지난 12월 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5개 지회장은 특근시 비정규직(장기근속자 자녀, 친인척, 대학 실습생) 투입을 사측과 합의했다(본지 118호 참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다수가 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부장이 파기할 수 없다고 해 그와 공방을 벌였다.

대의원대회 정회 기간에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변명만 실은 노조특보를 발행했다. 이 특보에서 집행부는 아직 사측과 협의하지도 않은 상여금의 통상임금분을 포함시켜 “1회 특근시 1조 29만 원, 2조 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구설냈다. 대법원 판결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아차지부 교대 근무자는 생생특근을 하지 않아도 월 평균임금이 35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인상되는데, 이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말이다.

지금까지 사측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고 연장 전업과 특근을 돈으로 유혹해 온 것이 현실인데, 집행부가 특근을 시행하려고 돈으로 조합원들을

구슬리려 한다는 것도 씁쓸하다.

지회장들은 1월 생산 특근을 합의하며 비정규직 투입을 용인하고 있다. 전투파인 광주지회 집행부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특근 횟수에 합의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아마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는 듯하다. 물론 실습생 제도가 어느 정도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3년 전 광주 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다 쓰러진 고교생은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광주지회 집행부는 비록 오랜 관행이더라도 비정규직 실습생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투적 활동가들은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합의서 파기 투쟁을 전개해야 일관성 있어 보이고 전투적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그동안 각 공장의 활동가들은 대자보와 리플릿 발행, 퇴근 홍보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1월에 특근시 비정규직이 투입되면 현장 조합원들이 ‘이제는 막을 수 없다’고 체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올바르게도 지금 많은 대의원들은 1월



사측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에 맞서야 한다.

8일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에 맞서 비정규직 투입 합의서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특근 거부 투쟁과, 또한 비정규직 알바 투입 저지 투쟁과 병행돼야 한다.

화성공장의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은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효과를 보려면, 비정규직 투입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의원들이 직접 나서 특근 거부 투쟁을 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체불임금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반대와 함께, 대법원 판결 이행 투쟁도 강력히 벌여야 한다. 12월 18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아차 조합원들은 월 평균 35만~40만 원가량 임금이 인상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말 특근을 하지 않고도 월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금 정몽구는 똥배짱을 부리고 있다. 그는 연비 과장 광고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소비자에게 4천3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놓고,

우리에게는 때먹은 임금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입단협에서 통상임금을 핑계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뱉어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사측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총액은 약 6천억 원이다. 누가 6천억 원 때문에 기아차가 망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정몽구는 주식만 6조 6천억 원을 소유하고 있고 정의선은 3조 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보유금은 2013년 11월 1백조 6천억 원이다!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측이 순순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리 만무하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개무시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정몽구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대가인 체불임금과 지금 당장 적용받아야 할 통상임금 인상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선언한 2월 25일 국민 총파업에 발 맞춰 싸운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이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서울디지털고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중구용산 시민모임'이 주최한 1월 10일 기자회견.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대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성공과 철도 파업의 효과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역사 교사

청송여고, 상산고 등 학교 20여 곳이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다. 군인 자녀들을 위한 신설 학교인 파주 한민고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서울디지털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기로 했으나, 올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 실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 등 우익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는 신년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김희정 등은 학교 현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전교조의 테러”, “전교조의 억지”라고 비난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교수 이명희는 “한국군 홍위병들이 동원돼 교학사 교과서를 분서경유하고 있다”고 했

지만, 이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가 광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줄 뿐이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여론의 압력에 밀려 계속 취소되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축 작전에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한 20개 학교를 찍어 유례없는 특별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더 큰 누군가의 외압을 받고 있는 이사장, 학교장들”이 역사 교사들에게 압력 넣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미개회,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학운위에서 순위 뒤집기 등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갖은 위법적 행동들을 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교육부 특별조사의 감사 대상도 되지 않았다.

“학교장의 간절한 요청으로 3순위로 학운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양심 선언한 동우여고 공기택 교사는 “역사 교사들에게 학교장이 행한 요청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언론에도 나왔는데 교육부는 나를 만나지도 않았

다”며 특별조사의 목적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빚장

정부·여당·교육부까지 직접 발로 뛰며 교학사 교과서 구축 작전에 나섰다. 사실상 완패했다. 제로에 가까운 채택률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지난해 9월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 단체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했다.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독재자 이승만·박정희와 이를 후원한 미국 제국주의를 찬양한 교학사 교과서는 대중적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수많은 오류와 표절 의혹 등에도 교과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 수경위원회까지 동원해 검정을 승인하고, 이것이 현장에까지 보급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대중적 반감과 분노가 실제 불

채택 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킨 중요한 고리는 전교조의 시정명령 거부 결정과 KTX 민영화에 맞서 싸운 철도 파업이었다.

전교조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시정명령을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거부해 전체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전교조는 이 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전교조 탄압 저지와 교학사 교과서 퇴출 요구·채택 거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전교조의 바통을 이어받은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전교조 교사를 포함한 역사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안녕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비판 대자보를 부착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의 웹사이트 비판 글 게

시, 항의 전화,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이 쏟아지면서 광범한 거부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이다.

이것은 12월 이전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다. 그때도 많은 교사들은 친일·독재미화 등 교학사 교과서의 극우적 역사 서술에 분노했다. 그러면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을지를 반신반의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많은 공립 고등학교는 확실하게 빚장을 걸 수 있겠지만,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철도 파업이 12월 정치 상황을 주도하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 이명희가 “인민 광풍”이라고 부른 항의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2천여 고등학교 중에 한 손으로 꼽을 숫자의 학교가 채택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세다. 생산지점에서 벌어진 투쟁이 상부구조에서의 투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독재 정권의 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는 것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우익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우익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데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은 “역사 교과서 검정 제도가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면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까지 “교육부에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 공론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며 국가 국정교과서 체제 부활을 촉구했다.

마침내 교육부가 편수조직을 부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정 교과서 시절

에 운영하던, 바로 그 편수조직이다. 그리 되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검정 과정 전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했듯,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사회 분위기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과거 독재 정부의 반동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이를 현재화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보면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보여 준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한 한국사능력시험을 통과해

야 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국가편찬위원장 유영익은 이승만을 국부로 찬양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부다. 또한 서울교육감 문용린은 중등 역사과 2급 정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수업의 강사로 뉴라이트 계열의 경희대 교수 허동현을 초청했다. 교사 임용단계부터 재교육과정까지 뉴라이트 계열의 우익 역사관을 교사들에게 주입하려 한 것이다.

검열

이렇듯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사 교육과 국가정체성 확립 주장은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노골화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공식적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익은 교학사 교과서를 발판 삼아 2017년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화해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를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그렸다.

이것은 19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에 담긴 교사들의 여망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다. 당시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전 민족의 노예화를 획책하던 일제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시류에 따라 부침한 정치권력의 편의대로 길들여진 종직한 시녀로 전락”한 것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며 전교조 결성으로 나아간 바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인 학생들의 생각을 통제해 지배계급의 사상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물론 검정제도도 검열 제도의 일부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해야 하고, 집필된 역사 교과서는 국가편찬위원회에 제출해 검정심의회의 검정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자유발행 체제로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이슈는 검정이나 국정이나 사이의 선택에 있다. 국정은 박근혜가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교과서이므로 국정체제를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조합 안에서 최선의 조직 방식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생겨난 이래로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특성에 관해 논쟁해 왔다.

때때로 노조 지도자들은 사용자들에 맞선 싸움을 선언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전투에서 뒷걸음친다. 철도노조 파업의 갑작스런 중단과 미온적인 민주노총 대응에 실망한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노조 지도자 개인의 결점이나 성향만으로는 이런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는 노조 관료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회적 지위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싸우지 않을까?

여기서 “관료”란, 노동조합 직책으로 생계를 꾸리는 전임 간부를 일컫는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설립자 토니 클리프는 “노동조합 관료는 대다수 노동자들과 달리 낮은 임금, 고용주의 일상적 괴롭힘,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 관료라는 지위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클리프는 노동조합 관료들이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니고 이 둘 모두와 구별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회계층”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노동조합 관료로서 겪는 물질적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사용자들과의 끝없는 교섭 관련 일들로 하루를 보낸다.

그들은 점차 작업장에서 멀어지고, 현장의 변화와 압력에서도 멀어진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입기 시작한다.

노조 관료들은 “타협”을 도출해 내 노동자와 사장 사이를 중재하고 노사 간 평화를 이루려 한다. 이것이 노조 관료가 하는 사회적 구실이다.

클리프가 말한 것처럼 “관료는 아누스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관료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

이것이 바로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의 힘은 조합원 다수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섭 기술에 있다고 흔히 믿는 이유다.

또한 그들은 조합원들보다 노조 기구들 자체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관료에게 노동조합이 점차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 썼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고귀해서, 투쟁의 이해관계도 그것에 비하면 부차적이게 된다.”

이 때문에 노조 관료는 노동악법에 아주 긴장한다. 악법 때문에 불법 행동으로 몰려 조합 기금이 몰수당하고 노조 기구가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재

노조 자체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무기다. 그러나 또한 노조는 투쟁을 제한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노조는 문제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위로로부터의 압력을 항상 받는다.

노동조합이 받는 이런 압력의 일부는 정당과 연결된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 정부는 노조들에게 “개혁 정부”에 맞서 파업하지 말라고 했다. “개혁 정부”의 성공에 협력해야 한다며 말이다.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노조들은 “자신의 정부”에 맞서 파업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20세기 초 영국의 현장조합원 조직인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는 노조 공식 지도부가 파업 중단을 선언하자 독자적으로 파업을 이어가며 결성됐다.

1919년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의 파업 사진.

이런 압력이 항상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의 노동자들은 사회당 정부하에서도 여러 차례 시한부 총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이제는 사회당보다 급진좌파 연합인 시리자를 더 지지하게 됐다. 이런 일들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서 받는 압력에 정치인들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조 관료는 결국 자신의 일자리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은 무엇보다 노조 기구를 확고히 방어하고자 한다.

그래서 노조 관료는 정부와 사용자가 노조를 지나치게 확대한다고 여기면 노조와 조합원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다.

이런 점은 좌파 노조 관료들이 전투적인 기층 조합원들에 호소해 당선하는 경우에 더 잘 드러난다. 좌파 관료일수록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이끌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노조를 바꾸려면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꽤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좌파 노조 관료와 우파 노조 관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좌파

노조 지도자들이 “변화의 표현일 뿐 아니라 변화의 브레이크이기도 하다”고 했다.

심지어 가장 좌파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도 다른 노조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가 가하는 보수화 압력에 취약하다.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는 현장과 더니 위로 올라가면 국민파가 된다”는 말이 이제 상식처럼 돼 있다.

가장 중요한 구분선은 관료와 현장조합원 사이에 그어진다.

현장조합원 조직의 중요성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노조 내에 있는 진정한 구분선은 파악하려면 이 두 집단(관료와 현장조합원) 사이의 차이를 봐야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합의 진정한 근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체제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이유를 창출한다. 그들이 노동을 중단하면 체제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노동계급은 기업주들을 타도하고 새 사회를 건설할 힘과 조직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안에서 중요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전투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노동자들은 중

종 관료에 속한 노조 간부들의 저지에 부딪히기도 한다.

단호한 행동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면 노조 관료에 기대서는 안 된다. 노조 관료는 노동자들과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그들의 구실은 타협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관료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현장조합원 조직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이것은 관료들이 중요하지 않다가나 관료를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현장조합원의 압력이야말로 관료들이 투쟁을 이끌도록 강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오늘날 노동조합 안에서 전투적인 노동자들은 대개 “현장조직”으로 불리는 그룹에 속해 있다. 이 그룹들은 주로 노조 집행부 선거 도전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서구의 계급투쟁 고양기에 등장한 (노조 관료가 싸울 때는 그를 지지하고 그가 싸우지 않고 뒷걸음질 치려 하면 독자적으로 싸운) “현장조직”과는 이름만 같을 뿐, 실체는 전혀 다르다.

독립

진보적 “현장조직”들은 좌파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공식 기구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독립적인 현장조합

원 조직 “현장조직”들은 좌파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공식 기구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독립적인 현장조합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조직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현장조합원 조직은 현장 기반이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 기초한다. 이 조직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

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조직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현장조합원 조직은 현장 기반이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 기초한다. 이 조직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

이런 행동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 1972년 영국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공인 파업을 조직했다. 이런 행동은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던 조합원들을 닷새 만에 석방해야 했다.

이처럼 현장조합원 조직은 노동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투쟁의 결과뿐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도 현장조합원 조직은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도록 도와 준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끌며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급진적인 사상도 더 개방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장조합원의 힘을 가장 강화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물론 현장조합원 조직이 있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는 직장위원회 운동이 성장했지만 그 정치는 취약했다. 개혁주의적인 노조 지도부, 공산당, 노동당 좌파가 직장위원회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공산당은 현장 투쟁을 건설하지 않고 오히려 좌파 노조 지도자 선출을 강조했다. 그리고 1974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은 노조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직장위원회 운동은 이런 세력들에 압도돼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가장 성공적인 현장조합원 조직은 전투적인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혁명적 정치와 만날 때 건설된다.

노동조합 안에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1915년 영국 글래스고의 파업 노동자들이 뛰어난 선례를 남겼다. 그들은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라는 현장조합원 조직을 건설했다.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는 모든 주요 공장의 현장 노동자 대표로 구성됐고 노조 지도자들의 반대를 거슬러 대규모 파업을 이끌었다.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는 “우리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한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것은 평범한 노동자와 노조 관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지침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강동훈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점검하며,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짜 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복리후생 삭감과 정원 동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에 포함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도 ‘방만경영’의 사례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방만경영’에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 감사원 조사를 보면, 한국전력공사(6개 발전기업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0곳이 2012년까지 해외 자원 개발에 총 34조 9천4백 89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회수한 투자금은 10조 5천7백32억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방만 경영을 해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힌 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 운운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철도 파업에서도 알려졌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임금’은 대부분 오랜 근속 연수예다가 교대근무, 연장근로 수당 등을 다 합친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면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도 삭감하려 나설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공격해 삭감하고 이를 발미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공격하는 정부의 시도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전술임을 알 수 있다.

부자 성장 정책

이런 일들을 감압적으로 밀어붙이고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징계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경영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한다며 일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권리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으로 얻어낸 것도 정부의 지침으로 다 무시하고 복리후생도 정부의 지침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단협이 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노동법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일 수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시도에 맞서려는 노동자들 2013년 12월 4일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공기업 12곳의 1년 영업이익은 총 4조 3천억 원으로, 이자(7조 3천억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는 부채 삭감을 발미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공격할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다.

실제로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8퍼센트 인상됐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킬로그램당 99원씩 올랐다. 다음달부터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우체국 택배 요금도 5백~1천5백 원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상수도료, 철도요금까지 올리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떠들며 공공기관 부채를 문제 삼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내는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 그것이 정상이다. 질 좋고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긴 적자는 마땅히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공공기관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매각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 18곳이 설립한 자회사는 2백45곳인데, 부채 해결을 명목으로 이런 자회사들을 매각한다면 민영화가 대거 진행되는 셈이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

관 정상화’뿐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내놓으면서 “내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결국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이라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병원들의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 진료 등을 허용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같은 입발림조차 내팽개치고, 자신이 예전에 주장한 ‘줄부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 같은 친부유층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내수 활성화를 언급했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이나 ‘최저임금’의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또,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강조했

지만, ‘고용의 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큰 돈벌이 기회를 줘야 경제가 살 수 있다는 ‘부자 성장 정책’만 있었다.

규제완화

이처럼, 박근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은 올해부터 경제 위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으로 올해 노동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부터 공격해 두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공격이 강력한 것만은 아니다. 철도 파업의 효과로 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지지는 더욱 많아졌고, 박

근혜 정부는 타격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도 민영화 반대 분위기에 힘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한국노총과 그 외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결해 굳건하게 싸운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확고히 연대해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서울 동부자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무엇을 노리는가?

연사 : 강동훈(레프트21) 기자

일시 : 1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 3,500원(학생 2,500원) 문의 : 010-9840-1236

추천 소책자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 노동자연대다함께 | 143쪽 | 4,000원

구입 문의: <http://workerssolidarity.org> | mail@workerssolidarity.org | 02-2271-2395